

산업안전보건과 비정규직

윤 조 덕*

지난 1월 7일 발생한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사건으로 4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이 중 17명은 외국인근로자였으며 나머지 내국인근로자의 대부분도 새벽 인력시장에서 데려온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이었다고 한다. 화재발생 당일에는 바닥 그라인딩 작업, 전기배선작업, 냉매(프레온가스)주입작업 등 5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하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4억 원이 넘는 냉동창고 신축공사임에도 이와 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공사장은 각종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비정규직 취업자수는 총 5,457천 명이며, 이 중 한시적 근로 66.5%(3,626천 명), 시간제근로 20.8%(1,135천 명), 단기근로 12.2%(667천 명), 특수근로 11.3%(617천 명), 파견근로 2.4%(131천 명), 용역근로 9.1%(498천 명), 가내근로 3.2%(175천 명)이다.¹⁾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매년 행하고 있는 「2006 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제조업 사업장 중 정규직 고용만 있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률은 99.9%인데 비하여, 비정규직 고용만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52.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비정규직 고용만 있는 5~49인 사업장 비가입률은 52.7%이다²⁾(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 가입토록 되어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yoonjd@kli.re.kr).

1) 한국노동연구원(2007), 『KLI 노동통계』, p.30.

2)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6),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교차통계집』, pp.20~21.

같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여부는 정규직 고용만 있는 사업장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비율은 97.8%인데 비하여, 비정규직 고용만 있는 사업장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비율은 45.9%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는 정규직 고용만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시비율은 78.7%인데 비하여, 비정규직 고용만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시비율은 52.1%이다.

2003년과 2004년도에 300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7개 업종(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의 사망재해자 및 부상자 10%를 표본추출하여 분석한 노동부의 산업재해원인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추락, 전도가 가장 많으며, 특히 추락사고는 비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산재의 31.4%)가 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산재의 10.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재해자는 총건설재해자 중 일용직 80.6%, 임시직 4.7%, 상용직 13.9%로 비정규직에서 85.3%를 차지하고 있다.³⁾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동향조사」 2004, 2005, 2006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조명우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제조업 고용형태별 재해율 추정치는 사내협력업체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시 고용사업장의 산재율은 1.13%인 반면에, 정규직만 고용한 사업장의 산재율은 0.82%로 나타났다. 또한 원하청 병행업체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시 고용사업장의 산재율은 1.37%인 반면에, 정규직만을 고용한 사업장의 산재율은 1.22%로 나타났다.⁴⁾ 이와 같은 통계자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율이 정규직보다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율이 높아지는 요인 중의 하나로는 1990년대 후반 자본시장 개방 이후 초국적 자본의 투자대상이 된 대규모 원청업체들이 주주자본주의적 배당요구에 직면하면서, 또한 세계화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중되고 있는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시키거나 비정규직 고용확대로 맞서고 있으며, 하청업체에 전가된 부담은 다시 재하청 관행이나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고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보다 산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큰 이유”에 대한 설문 응답자 중 하청·과건 비정규직 근로자(임시+단시간)의 응답 순위는 ‘작업시간이 더 불규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작업환경이 더 열악’, ‘담당업무가 자주 바뀐’, ‘개선요구할 대표자(노조) 없음’, ‘작업량이 더 많음’, ‘작업도중에 이의제기할 수 없음’, ‘안전조치 및 관리미흡’, ‘하는 일이 더 위험’의 순으로 나타났다.⁵⁾ 이와 같은 조사결과

3)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2008), 「산업재해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방안」, 내부자료.

4) 조명우 외(2006),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36.

비정규직 근로자가 느끼고 있는 산재위험 인식은 작업의 위험성 또는 안전조치 미흡보다는 작업조직 또는 이의제기를 포함한 의견개선제도 미비를 보다 큰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50% 내외에 불과하고, 일반건강검진 검진률 또한 50%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교육 실시율도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의 방치는 사업장에서의 재해율 및 업무상 질병발생률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총체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적 정책수립과 집중적·효율적 산재감소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KL**

5) 조명우외(2007), p.92.